

[자료집]

한중FTA 대응방향 모색 토론회

일 시 : 2012년 9월 24일(월) 14시30분
장 소 : 국회본관 3층 귀빈식당

주최 : 한중FTA중단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한중FTA중단범국민운동본부

[자료집]

한중FTA 대응방향 모색 토론회

일 시 : 2012년 9월 24일(월) 14시30분
장 소 : 국회본관 3층 귀빈식당

주최 : 한중FTA중단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한중FTA중단범국민운동본부

식량위기와 FTA

- 식량주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2012. 9. 24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발표자료

식량위기와 FTA

- 식량주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2012. 9. 24

장 경 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상대적 식량위기 / 절대적 식량위기

세계 곡물 생산량 및 소비량 변화(단위 : 백만톤)

※ 주 : E(추정치), P(관측치)
※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http://fas.usda.gov/psd>)

곡물년도	생산량	소비량	생산-소비
1990/1991	1,779	1,711	68
1995/1996	1,872	1,808	64
2000/2001	1,846	1,860	-14
2001/2002	1,879	1,905	-26
2002/2003	1,822	1,910	-88
2003/2004	1,863	1,949	-86
2004/2005	2,044	1,994	50
2005/2006	2,016	2,031	-15
2006/2007	2,003	2,044	-41
2007/2008	2,084	2,105	-21
2008/2009(E)	2,124	2,147	-23
2009/2010(P)	2,179	2,234	-55

곡물 생산/소비 변화추이(단위 :백만톤)



식량위기와 가격폭등



세계 주요 곡물가격의 증가율(단위 :달러/톤)

※ 주 : 같은 FOB 기준. 밀, 콩수수, 쌀은 선물가격 기준
 ※ 자료 : USDA, ERS (<http://www.ers.usda.gov>)에 기초하여 증가율만 별도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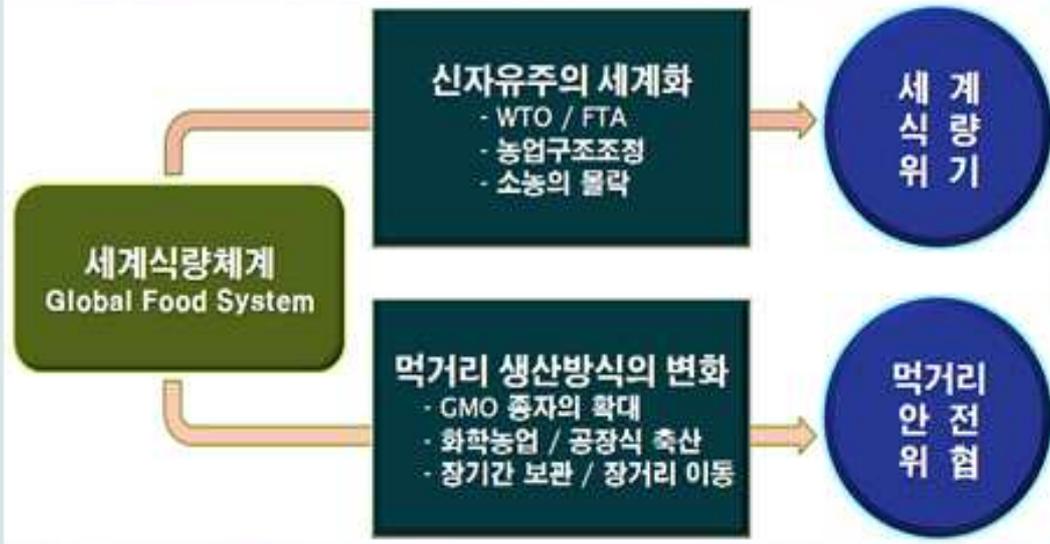
구분	옥수수	쌀	콩	밀
2000년(\$/MT)	88.22	206.69	193.02	118.63
2008년(\$/MT)	223.13	697.48	474.74	344.58
00/08 증가율	252.9%	337.5%	246.1%	290.5%
2010년(\$/MT)	174.25	512.45	390.54	228.78
00/10 증가율	197.5%	247.9%	202.3%	192.9%

☞ 2010년 상반기에 2008년 최고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관측

2007/08년 세계식량위기 지도



총체적 식량위기 : 상대적+절대적+먹거리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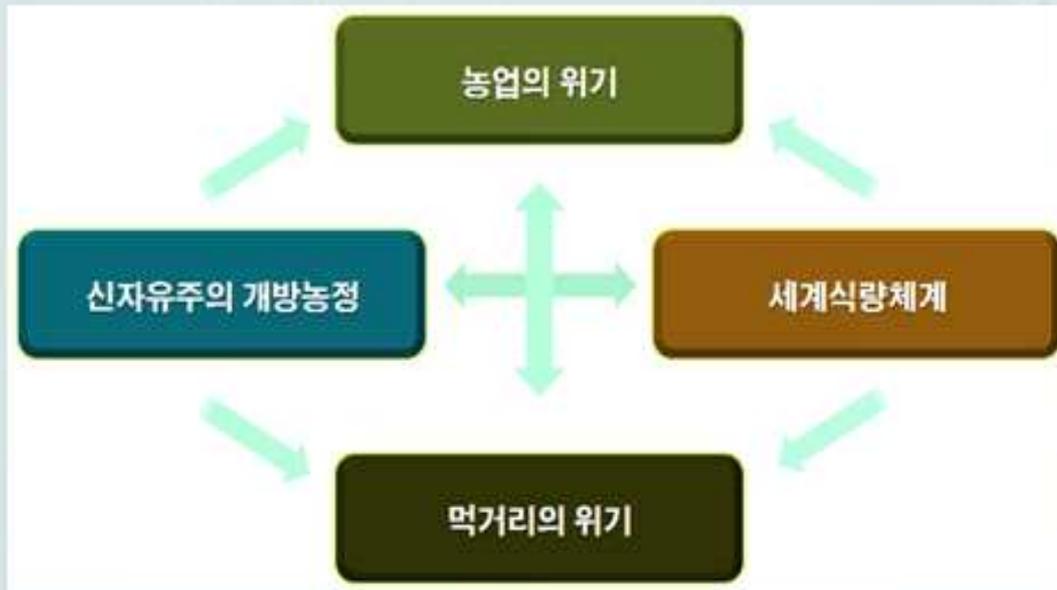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농업의 위기

- 전제조건: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
- 핵심정책: 선택과 집중에 의한 농업구조조정
- 보완대책: 연착륙 유도 농가부담 경감대책들

농업의 위기

농업의 해체	✓ 식량자급률: ('90) 43.2% → ('10) 26.7%
농민의 분해	✓ 농가인구: ('90) 약 715만명 → ('10) 약 313만명
농촌의 붕괴	✓ 농가부채: ('90) 약 470만원 → ('10) 약 2,734만원

농업의 위기와 먹거리 위기



농업의 위기가 먹거리의 위기로

첫째, 자금을 하락으로 수입 먹거리에 의존

-- 국내 농업해체 → 식량자급률 약 25% 수준 하락 → 먹거리의 약 3/4을 수입 먹거리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먹거리 위험이 크게 증가

-- 글로벌푸드시스템이 제공하는 수입 먹거리 때문에 한국 사회의 먹거리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먹거리 대란과 가격파동이 대형화

-- 농업해체로 국내 농업생산기반이 취약 : 기상요인으로 인한 작황불안이 가격파동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넷째, 먹거리 양극화와 건강 불평등

-- 먹거리의 양극화 : 저소득층과 빈곤층일수록 위험한 먹거리를 더 많이 섭취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해외식량조달의 한계

식량위기에 따른 정부대책 → 해외조달에 중점

2020년까지 약 65%수준의 안정적 식량확보 목표

- 2020년까지 국내 식량자급률 약 32% 목표
- 2020년 해외조달로 약 33% 식량확보
- 해외조달방식
 - 해외농업개발 138만톤 + 국제곡물조달시스템 400만톤

해외조달방식의 한계

경제적 타당성,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서 실효성 결여

물새를 공략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

안정적인 식량확보 대책

최우선적으로 국내 식량자급률증
높이는데 중점

다음으로 남북 식량협력과 인근
국가와의 식량보장 협력체계 구축

해외조달방식은
보완적인 수단으로 가능

식량안보 vs 식량주권

변질된 식량안보론

-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조달을
국내자급률과 거의 동등하게 취급

새로운 식량주권론

- 국내 식량자급률을 해외조달보다 우선
- 해외조달은 보완적인 것으로 취급

식량주권 패러다임의 국제적 확산

- 1997년 비아 캄페시나가 제시
- 2004년 UN/FAO 식량권 가이드라인 권고
- 2005년 UN인권이사회 등이 지지
- 식량주권을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추진하는 움직임 확산
- 식량위기의 대안 패러다임이 식량주권으로 수렴되고 있음

한미/한중 FTA

한미FTA

· 연간 약 0.9조원 농업피해 / 15년간 12.2조원 농업피해

한중FTA

· 연간 약 2.3-3.4조원 농업피해 / 15년간 약 29-40조원 농업피해

증생산액	약 40.1조원	비 고
곡물류	약 23.7% (쌀 비중 약 22.5%)	2014년 쌀관계학 유예 10년 종료
채소류	약 20.2%	한중FTA
과일류	약 8.9%	한중FTA / 한미FTA
축산물	약 42.6%	한미FTA / 한중FTA
임산물	약 4.4%	한중 FTA

한미FTA 막아낼 수 있나?

● 한미FTA 폐기의 현실적 필요성은 증대어는 상황

- 서울도시철도 9호선 : ISD 소송 거론
- 먹튀자본 론스타 : ISD 제기

● 그러나 폐기의 실현적 힘은 현재이 약화된 상태

- 4월 총선에서 야권연대의 과반 실패
-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의 내분
- 민주당내 폐기주장의 발언권 약화

폐기 가능성
현실적 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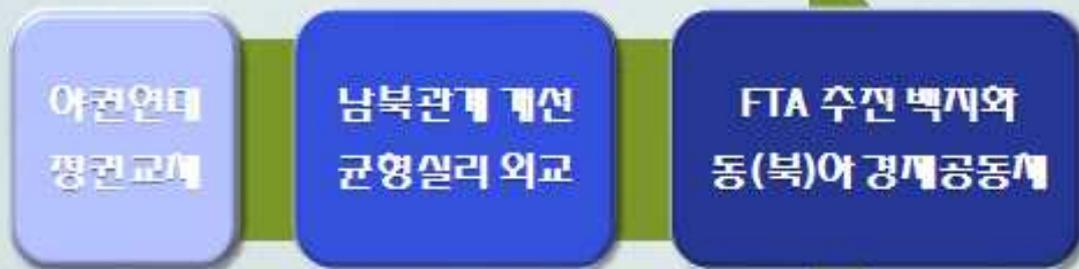
세계경제 악화
보호주의 강화

세계경제 더블딴
폐기의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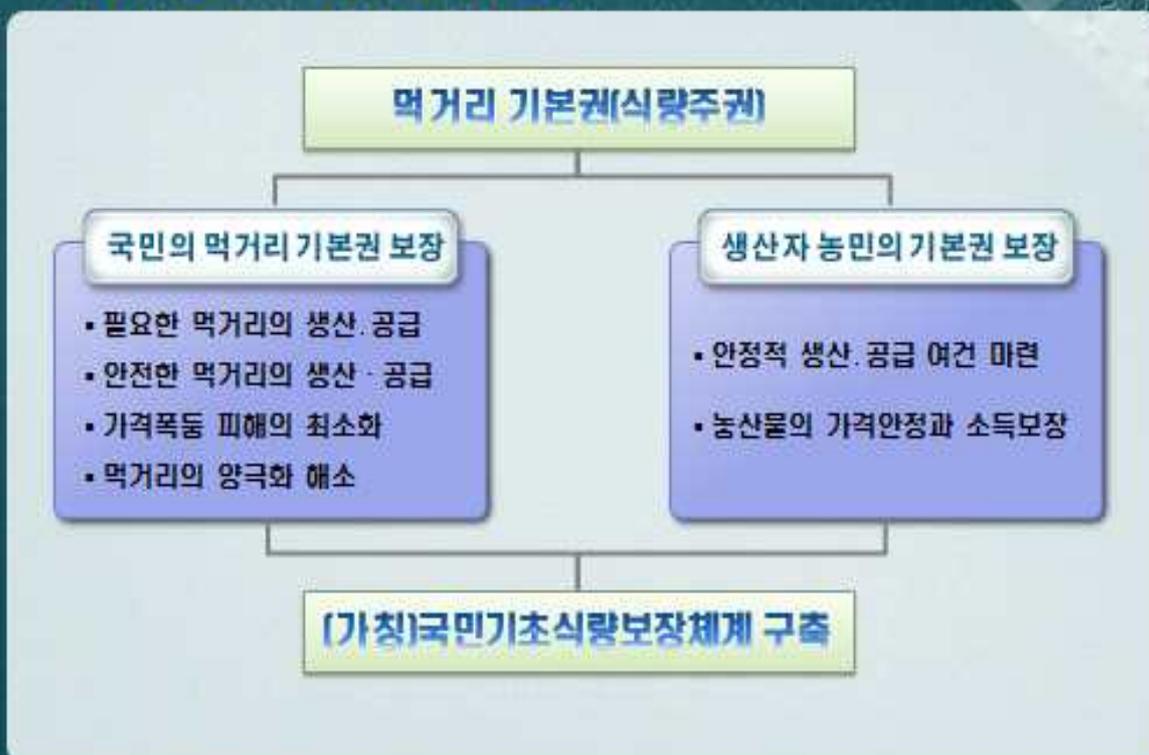
한중FTA 막아낼 수 있나

● 한중FTA 폐기,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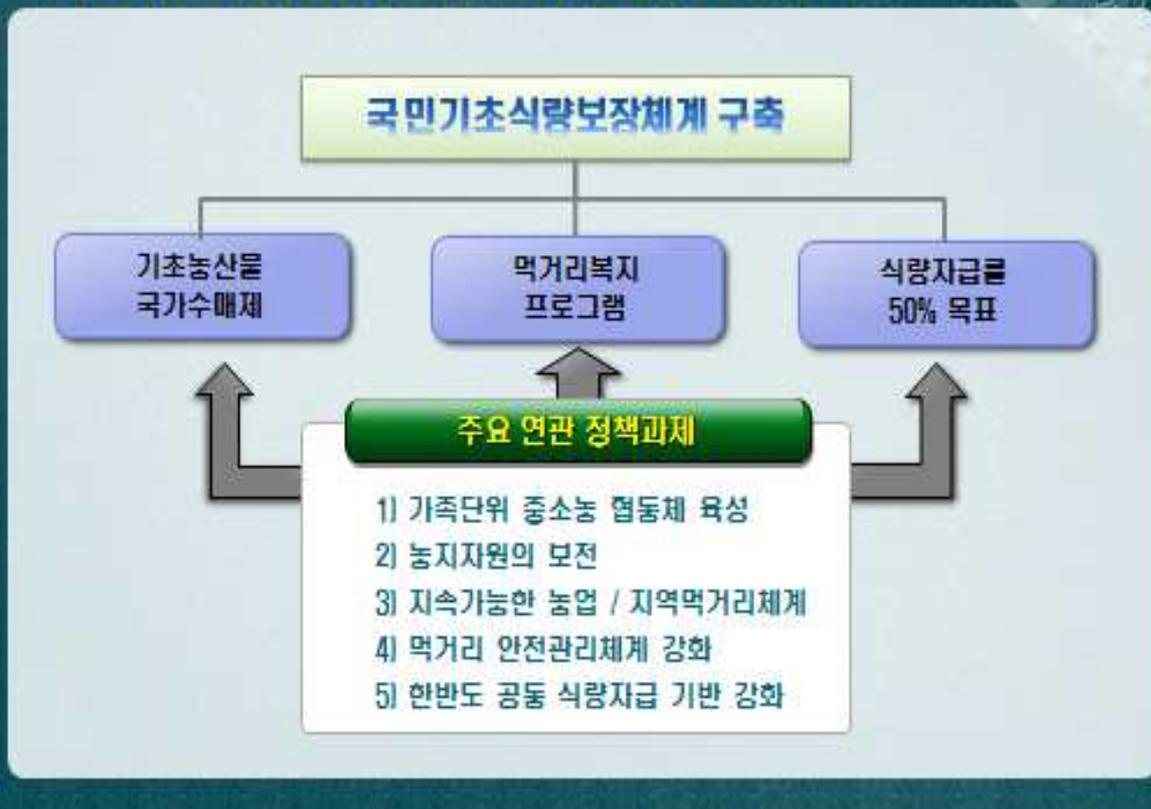
- 한중FTA는 중국의 대미 견제, 한국 견인 차원에서 시작
-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은 약 40%, 중국의 대한 무역 의존은 약 9%
- 중국은 한국을 중간균형 위치로 견인하는 정치외교적 목적이 우선
- 한중일간 수평적 국제분업이 이미 상당 수준, FTA 필요성이 높지 않음



식량주권 = 먹거리 기본권



식량주권(먹거리 기본권) 실현 주요과제



정책연합 : (가칭) 먹거리 기본권 사회협약

의미/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 먹거리 위기의 해결을 위해 ● 식량주권 = 먹거리 기본권, 먹거리 민주주의
주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국회 ● 생산자 농민과 국민(시민사회)의 대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먹거리 안정적 보장 안전한 먹거리의 보장 먹거리 양극화 해소 가격폭등 피해의 최소화 ● 생산자 농민의 기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생산기반의 보장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보장 ● 국가의 의무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거리 기본권의 제도화 / 입법화 사회협약기구 구성 및 운영

먹거리 기본권 사회협약 추진과정 (예시)

민간차원의 사회협약 : 생산자 + 시민사회

사회협약 추진 서명운동 : 국민 참여 + 사회의제 공론화

사회협약을 2012 총선 및 대선에서 공통 공약화

대선 후 즉시 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 : 민관 거버넌스 구축

특별기구에서 국내 먹거리 기본권 실태보고서 작성 및 검토

실태보고서를 바탕으로 사회협약의 구체적 내용 작성 및 합의

민관 공동의 사회협약 체결 및 입법화, 정책시행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 제 문

한·중FTA 영향분석 및 농업계 요구사항

2012. 9. 24

손재범 한중FTA중단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추이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78.5%에서 2012년에는 59.1%로 격차가 확대
 - 농가소득은 1995년 이후 연평균 2.5%(명목소득) 증가한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5.2% 증가하여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 됨

□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

- 1970년 1442만명에서 2011년 296만명으로 300만명선이 붕괴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6%로 급감
 -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21년에는 45.6% 수준으로 고가 더욱 심화될 전망

□ 2003년 이전에는 농업소득이 농업조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경영비 비중이 높아져 2009년에는 농업소득 비중이 36.4%로 하락

- * 특히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조수입은 3.6% 증가한 데 비해 경영비는 8.2% 상승하여 우리나라 농가경제 수지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

- 200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행 관세율을 평균50% 감축한다고 가정할 시 년평균 최소 1조 9560억원, 15년간 총 29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한EU FTA의 경우 15년간 연평균 1,776억원 정도의 농업생산액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미FTA의 경우 8,150억원 수준으로 예상

<표 1. 한·중 농림축산물 교역동향>

	한미	한EU	한중	총계
15년간 농업생산액 감소합계	12.2조원	2.6조원	29조원 추정	최소 43조원
년 평균 감소액	8150억원	1776억원	1조 9560억원 추정	최소 2조 9486억원

정부발표에 따른 직접피해액(농업생산감소액) 추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용

- 제시된 수치는 단순한 생산감소액 추정치로서 농관련 산업 붕괴, 인력 유입단절, 농업 부가가치 하락 등을 감안할 시에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 우리나라의 대중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 12.9억 달러에서 2011년 30.9억 달러로 악화

<표 2. 한·중 농림축산물 교역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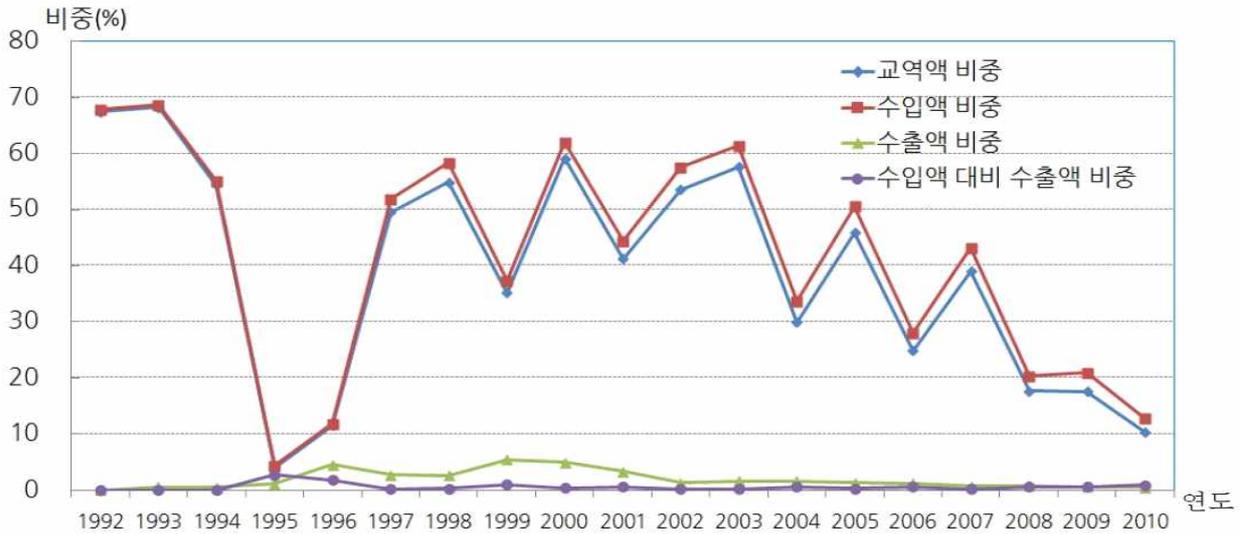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수출	국가전체	184.6	619.2	913.9	867.0	1,168.4	1,341.9
	농림축산물 (비중)	1.18 (0.6)	2.31 (0.4)	3.49 (0.4)	4.20 (0.5)	5.56 (0.5)	9.15 (0.7)
수입	국가전체	128.0	386.5	769.3	542.5	715.7	864.3
	농림축산물 (비중)	14.1 (11.0)	22.2 (5.7)	26.2 (3.4)	28.2 (5.2)	32.3 (4.5)	40.0 (4.6)
무역수지	국가전체	56.6	232.7	144.6	324.6	452.6	477.6
	농림축산물	-12.9	-19.9	-22.8	-24.0	-26.7	-30.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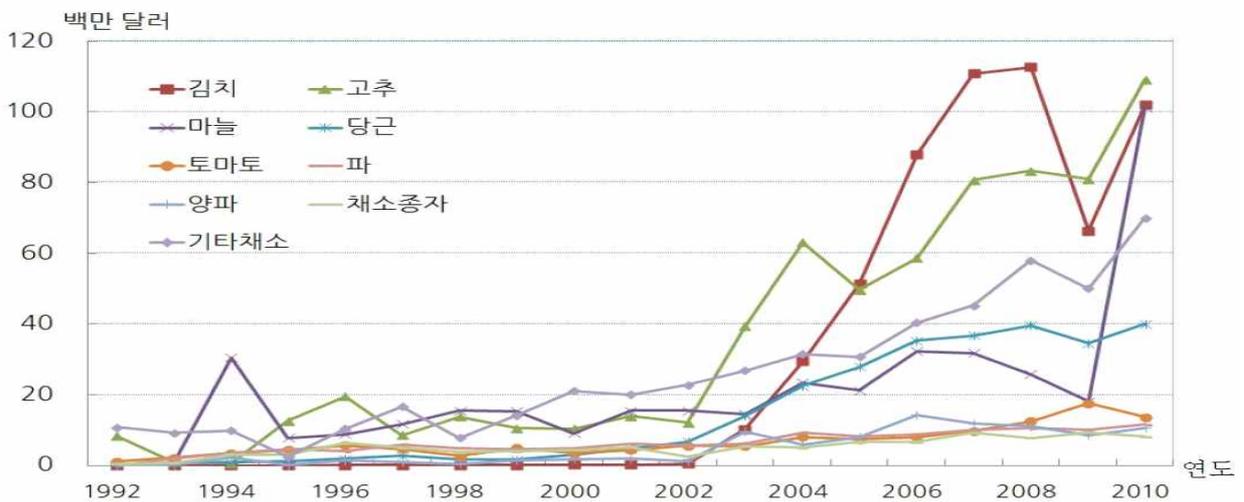
- 현재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채소류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7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식생활과 밀접하고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김치, 고추, 마늘, 파, 양파, 당근, 무, 배추 등 주요 채소의 중국산 비중은 95%를 상회

<그림 1. 대중국 농산물 무역에서 식량작물의 비중 변화>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그림 2. 중국 채소류 주요 품목별 수입액 변화>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 중국 농장과 기업의 특징은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농산물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수출기지인 산둥성 등에서는 무상임대 등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음
 - 실제 중국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무역촉진자금 및 재정지원 등 정책자금지원, 금융서비스, 교육훈련서비스 등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음
- 중국의 토지비용과 임금은 우리나라 10분의 1 수준이 다보니 농축산물 생산비는 우리의 20~30%에 불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0년 한국과 중국의 주요 농축산물 30개 품목 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돼지고기·닭고기를 제외한 28개 품목에서 우리 가격이 중국보다 2배 이상 높았고, 23개 품목은 3배 이상 차이가 있음
- 시설채소와 과수는 대부분 시설부분에 많은 자본 투자가 있어 왔고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젊은 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임. 그런 상황에서 중국산 신선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은 국내산 대비 평균 30%에 지나지 않아 관세가 철폐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임
-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높으나 관세인하 및 철폐로 지금보다 고품질의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진입할 시 장기적으로 중국 농산물의 수입량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협상 전략

- 조기수확프로그램(EHP) 실시로 상대국이 자유무역의 효과를 단기간에 체험토록 하여 본격적인 협상에서 추진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적으로 운용
 - 대만, 아세안FTA 협상에 적용
- FTA 협상 상대국에 따라 정치외교적인 성과를 위해 경제적 실익을 양보하는 전략과 경제적인 성과를 위해 경제적 득실을 치밀하게 반영하는 이중전략을 구사
 - 농업강대국인 칠레, 뉴질랜드와는 양허제외를 비롯해 10년 이상 장기에 걸친 관세철폐 등 신속적 양허안 제시
- 초기 FTA에서는 농산물세이프가드(SG) 조치에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점차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상에 반영하는 추세
 - 중·뉴질랜드 FTA에서 일반적 무역구제조치인 다자간SG와 양자간SG외에 특별농산물SG도입
- FTA협정의 범위가 상품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투자,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어 포괄적FTA를 지향하는 추세

□ 중국의 협상 특징

- 뉴질랜드, ASEAN, 칠레 등 모든 국가와의 FTA 협정문에 양허 제외 품목을 설정하고 대상국에 따라 자국의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이행기간 장기화, 또는 중간심사제도를 적용
 - 뉴질랜드와의 FTA 협정에서 뉴질랜드는 모든 품목 양허했으나 중국만 일방적으로 50개 품목 양허 제외
 - ASEAN과의 FTA에서는 커피와 차류, 채소과일조제품, 담배 등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

- 인접 국가들에 FTA 효과를 단기간내 체감 할 수 있도록 조 기수확프로그램(EHP)에 따라 자발적으로 양허 폭 확대
 - ASEAN과의 FTA: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2~3년 내 관세 철폐, 상대국 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행기간 신축적 적용

- 비관세 분야의 동식물 검역 분야에서 동식물 질병의 발생에 관한 '지역 조건의 채택' 위한 조항 명시
 - 중·뉴 FTA의 경우 제80조(지역조건의 채택) 1항 “수출국이 해충이나 질 병 없는 지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수입국은 이를 평가, 인정할 수 있 음”
 - 중·칠 FTA에서는 제56조(일반조항) 1항 “양국은 특히 다음(d; 지역조건을 인정하는 조치)에 대한 SPS 협정의 권한과 의무를 재확인함”
 - 중·페루 FTA의 경우 제87조(병해충 미발생 또는 저발생 지역의 인정) 1 항 “수입국은 관련 국제기구가 병해충 미발생 또는 저발생 지역으로 인 정한 지역에 관해 수출국이 제공하는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수출국의 요 청에 의해 효율적으로 인정하여야 함”

- 중국은 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 일반적인 무역구제 수단인 다자간 SG와 양자간 SG 외에 특별농산물SG(SASM)를 규정
 - 뉴질랜드의 경쟁력이 높은 우유와 크림, 버터, 치즈 등 낙농품 11개 품목 을 SASM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최장 2023년까지 발동할 수 있는 발동 기준 물량 명시

□ 한·중 FTA 협상의 특징

- 1단계(모델리티) 협상 합의 후 2단계 협상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협상구조로 진행
- 민감 및 초민감품목 구분을 상호 인정하고 우선적으로 논의 후 진행
-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제조업 품목도 민감품목에 포함

□ 1차 협상 결과

- 향후 협상운영의 기본원칙과 지침 등 협상운영세칙(TOR) 확정
 - 협상원칙과 협정 대상, 단계별 협상 방식, 분야별 협상의 틀(Modality)의 골격, 한반도역외가공지역·행정사항 등 포함
- 양측 수석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ng Committee) 설치
 - TNC에서 분야별 협상지침 작성 및 협상 전반 관할, 조정하고 필요시 산하에 협상분과 설치 예정

□ 2차 협상 결과

- 1차 협상에서 합의된 협상운영세칙(TOR)을 기초로 분야별 협상의 틀(Modality)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 진행
- 일반품목군 비중과 품목군별 정의하고 비중산정기준에 대한 기초적인 1차 의견 교환
 - 민감품목군 비중의 농수산업과 제조업 구분에 합의

□ 3차 협상 결과

- 상품, 서비스,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등 분야별 협상 지침(Modality) 마련을 위한 협상 진행
 - 정부조달, 지적권, 전자상거래 및 경쟁정책 등의 전문가회의 개최하고 분야별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 상품 분야는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일반/민감/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품목군별 정의에 합의
 - 일반품목군은 '10년 이내 관세 철폐', 민감품목군은 '10년 초과 관세 철폐'로 정의하였으나 초민감 품목은 미정
 - 품목군별 선정 기준은 품목 수와 수입액을 동시 적용하기로 의견 접근

□ 한중FTA협상에서 농어업부문 제외 관철

- 중국과 일반적 의미의 FTA를 체결하고 대다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경우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될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
- 한중FTA가 타결될 시 농업생산 활동의 위축과 농촌경제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향후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
- 현재 진행중인 협상 결과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제조업 품목도 민감품목에 포함하기로 되어, 최대 피해산업인 농어업의 보호기능은 미약할 수 밖에 없고 이마저도 피해산업간의 어려운 조율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난항을 겪게 될 것임
- 따라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농어업부문 제외'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여 개방수준, 개방폭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을 삼고 대응해야 함

□ 한중FTA협상을 잠정 중단하고 차기정부로 이양

- 한-미FTA가 체결 뒤에 발효까지 5년 가까이 많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본 것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조금 천천히 추진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효한 통상정책이 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을 잠정 중단(보류)하고 차기정부에서 산업별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함

□ 통상절차법의 즉각적인 개정

- 2012년 7월 18일 시행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장관은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국회 통외통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행중인 통상협상에서 6조는 예외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기능이 무력화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통상절차법의 제정 취지가 무색하여 법 제정 이후에도 기존관행대로 협상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입법부의 견제기능이 발동을 못하고 있음. 따라서 차기 정부로 이양될 가능성이 높은 한중FTA는 법률의 즉각적인 개정을 통해 국회보고 기능을 확립하여 통상절차의 민주적인 체계를 확립해야 함

- 참고 문헌 -

어명근(2012) “한·중 FTA: 농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농촌경제연구원(2012) “중국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수출입제도”

이정환(2012) “한중FTA를 말한다”

농협중앙회(2008) “한·중 FTA 협상이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

발 제 문

식량위기시대! 한중 FTA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2. 9. 24

주제준 한미·한중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 식량위기

1) 식량위기의 양상과 원인

- 세계 곡물시장이 출렁이고 있음. 옥수수, 밀,콩 등의 국제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
- 식량가격 급등의 주기가 10여년에서 최근 1.6년으로 대폭 축소 되고 있음.
- 식량위기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 그리고 소비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 곡물 메이저 기업의 독과점 횡포, 식량보호무역주의 입.

○ 기후 변화

- 2010년 9월 이후 국제 곡물가격은 2002~2004년 평균 곡물가격의 2배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1)
- 2010년 7월 러시아 가뭄으로 밀가격이 폭등하더니 8월 파키스탄의 대홍수로 쌀가격이 급등함. 다시 11월에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가뭄과 고온이 지속돼 아르헨티나의 옥수수와 대두 작황이 좋지 않았음.
- 올해 초에는 남미 가뭄으로 대두 생산량이 급감. 중국에서의 여름 가뭄으로 옥수수 작황 부진, 6월 부터는 미국 중서부에 최악의 가뭄이 닥쳐 옥수수 대두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곡물가격이 급등함.
- 중요한 점은 10년여 간격으로 일어났던 국제 곡물파동의 주기가 1~3년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것. 세계 곡물파동이 상시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함.

1) 라니냐는 동부 적도 태평양에서 해면 수온이 평년보다 1~2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라니냐는 스페인어로서 여자를 일컫는 말로 '아기 예수'를 의미하는 엘니뇨의 반대 뜻이 붙여진 이름. 대체로 엘니뇨 현상과는 반대로 기후가 나타남.



[그림1] 기상 이변과 기후변화에 따른 곡물 수확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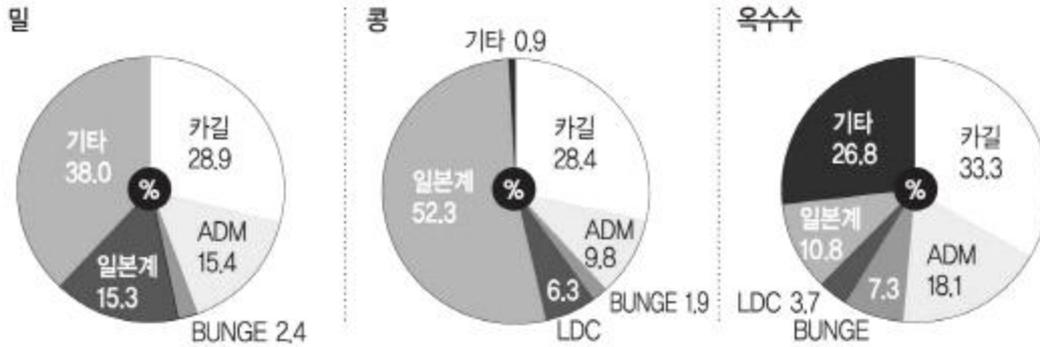
○ 소비의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

- 2000년 이후 세계 곡물시장에서는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음.
- 곡물 소비량은 1980년 이후 연간 14억t 수준에서 현재 22억 8700만t으로 급증함. 신흥국에서의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바이오연료 의무사용 증대 등으로 곡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

○ 곡물 메이저, 독과점 횡포

- 세계 곡물 가격은 초대형 곡물 상사인 곡물 메이저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카길(Cargill), ADM, 병기(Bunge), 루이드레뤼스(LDC) 등 상위 4개 회사가 전 세계 곡물 교역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곡물 저장시설과 곡물 운송을 위한 항만시설 등도 각각 75%와 50%를 점유하고 있다.
- 한국도 이들 메이저들로부터 전체 수입물량의 60%가량을 수입하고 있음. 2008년 기준으로 콩 65.8%, 옥수수62.4%, 밀 58.4%에 이룸.
- 한국은 세계 5위 곡물 수입국이지만 이들 회사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음.

한국 수입곡물 중 곡물 메이저 비중 ※2003~2008년 도입량 기준,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메이저 4개사(카길, ADM, BUNGE, LDC)비중 : 밀 46.7%, 대두 46.4%, 옥수수 62.4%

[그림2] 한국 수입곡물 중 곡물 메이저 비중

○ 식량보호무역주의

- 사료업계는 최근 사료용 밀(소맥) 가격이 올라가자 밀 수출국인 러시아를 주시하고 있음. 2007~2008년 곡물과동 때 러시아는 밀에 40%, 보리에 30%의 수출세를 부과했고, 2010년 러시아의 밀 생산지에 심각한 가뭄이 들자 밀 보리 호밀 옥수수 등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음.
- 곡물 수출국이 수출을 규제하면 국제 곡물가격은 또다시 급등함. 개도국의 농업 개방으로 인해 농지가 파괴되면서 결국 식량 생산 국가도 독과점화 된 것. 옥수수는 미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4개국, 대두는 브라질과 미국 2개국이 전세계 무역량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독점체계가 근본적 문제인 것.
- 미국도 국내 곡물 공급 부족시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수출제한을 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법을 마련해 놓고 있음.
- 평소 농산물 무역 자유화를 주창했던 곡물 수출국들이 식량 위기 상황이 오자 수출을 제한하는 모순을 연출하고 있음.

2) 한국의 식량자급률

○ 자급률 추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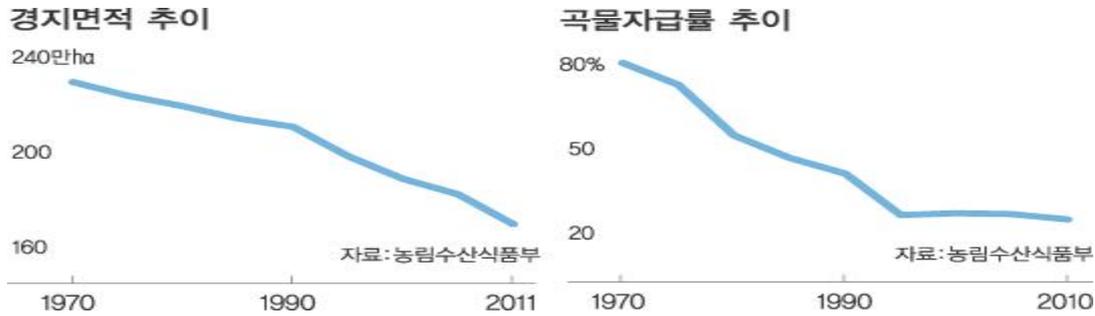
- 농림수산물식품부가 9월 5일 잠정 집계한 '국내 곡물 자급율 현황'을 보면, 지난해 쌀 자급률은 2010년 104.6%에서 21.6% 포인트 감소한 83%로 축소됨.
- 이에 따라 곡물 자급률도 22.6%를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 곡물 가격 상승 예상

- 8월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곡물가격 급등 여파가 올해 말부터 국내에 상륙, 곡물가가 30~40%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옴.
- 농촌경제연구원은 "국제곡물가격은 보통 4~7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 4분기부터 국내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언급.
- 현재 7~8월 밀과 대두(콩)의 국제가격은 각각 41.4%, 42.9% 상승했고 옥수수도 27.5% 올랐음

○ 국제 곡물가 상승 - 국내 축산물 가격 폭등으로 연쇄 반응

- 옥수수 세계 최대 생산지인 미국의 옥수수 가격이 뛰면 국내 시장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옥수수 수입국임.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총 곡물 수입량 1571만2000t의 57.7%인 905만9000t을 수입하고 있음.
- 한국의 옥수수 곡물자급률이 0.8%로 미미함. 한국에 수입되는 옥수수 양의 75% 이상은 가축 사료로 사용됨. 당연히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됨.



[그림3] 한국의 경지면적 변화추이 및 곡물 자급률 추이,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인용

○ 농지 축소, 식량위기 대응 능력 상실

- 역대 정부는 공업화라는 이유로,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이유로 농지를 없애고, 농수산물 시장을 내주는 대신 정보기술(IT), 전자, 자동차 산업 등의 육성 함.
- 그 결과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지만, 식량 주권은 약화되었고, 상시화하고 있는 식량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곡물자급 능력마저 상실할 지경에 놓이게 됨.

2. 식량주권과 FTA

1) 농업개방과 식량주권 양립할 수 없어

“(개발도상국의) 농업시장이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 경쟁에 개방되는 것은 빈곤 퇴치와 식량 안보, 그리고 환경 문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세계식량기구FAO,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공동연구 보고서 중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WHO)가 구성한 공동 연구기구인 ‘개발을 위한 농업 기술과 과학에 대한 국제 평가’(IAASTD)가 2008년 펴낸 보고서의 한 구절임.
- 보고서는 “각국의 식량 수입이 증가하면서 어떤 나라도 (식량 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밝힘.
- 농산물 수출국들이 주도하는 ‘농업 자유무역’이 식량위기 해

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

2) 중남미 국가들과 FTA

○ 중남미FTA와 식량주권

-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정책센터(CIP)의 아메리카스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자유시장으로 인한 중미의 식량위기'라는 보고서에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으로 대표되는 '통상자유화' 이후 중미 정부들은 자국에 싼값에 대량 수입되는 상품을 굳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말도록 권유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 등 6개국은 2005년 중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 이후 농업은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대체됐고, 2001년 평균 40%대에 달했던 중미지역의 농업용지는 2008년 7.4%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는 분석.
- 자국에서 식량수급을 제어할 수 없게 된 이들 국가의 물가는 세계 곡물가격 등락에 따라 휘청거렸고 결국 2008년 식량위기 당시 엘살바도르 도심의 1인당 한 달 기본 식품비는 44.8달러로, 전년(38.4달러)보다 6.4달러 올랐음.

○ NAFTA와 농업

- 로라 칼슨 멕시코시티 국제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미국 '포린폴리시 인 포커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이후 수백만명의 멕시코인이 기아 상황에 놓였다"며 "멕시코의 영양실조는 자신들이 소비할 기본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것에서 '농업개방' 모델로의 이행을 강제한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밝힘.
- NAFTA 체결 이후 싼가격의 미국산 옥수수가 멕시코로 물

밀 듯 들어오면서 멕시코농민 300만명은 농토를 잃고 농촌을 떠나게 됨.

- 하지만, 몇 년 후 생산기반과 유통시장을 장악한 미국의 농업기업들이 옥수수 가격을 크게 올리기 시작했으며 세계 식량위기와 겹치며 2007년 옥수수로 만든 주식인 토르티야 가격이 급등해 폭동이 발생되기도 함.

3) 한국정부, 세계적 추세와는 다른 자국 농업 외면 정책

- 한국 정부는 식량위기 상황을 외면 또는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 한국정부는 식량위기에 대응해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해외 식량기지 건설, '한국형 카길' 설립 등을 추구하고 있음.
-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세계적 추세와 다른 정책을 펴고 있는 것.
- 유럽연합(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고,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과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 협상도 진행 중임.

3. 한중 FTA 협상 현황

1) 5월 14일 1차 협상

- 7월 초 한국에서 2차 협상, 대략 두달에 한번꼴로 협상예정
- 한국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5월 14일 오전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에서 시작되었음.
- 협상은 민감 품목을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1단계 협상을 벌이고 2단계에선 상품 관세 양허를 비롯해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등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양국이 합의 했다고 함.

- 1단계 민감성 부문에서 양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2 단계로 넘어가지 못함. 한국측 민간 품목은 각종 농축수산물 품목과 일부 제조업 분야이며, 중국쪽에선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으로 예측됨.
- 최석영 수석대표 “ 한미 FTA보다 개방 정도가 낮아질수도 있다.”
 - 최석영 한중FTA 수석대표 1차 협상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개방 정도를 놓고, 양측간 시각 차이를 확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협상 범위 등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밝힘.
 - 최 대표는 이미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한 미국과의 FTA를 들어가면서, "한미FTA보다 개방 정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언급.
 - 당초 중국과 상품을 비롯해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려던 정부 계획이 쉽지 않음을 인정한 것.
- MB "한중FTA 2년안에 가능"
 - 1차 협상을 마치고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6일 한중FTA와 관련, "한국과 중국간 양자 합의는 아마 가능하면 2년 안에 될 수 있다"고 언급.
 -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많았지만 한중 간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중 FTA가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FTA보다도 예상보다 빠를 수가 있다"고 밝힘.

2) 7월 3일, 제주에서 2차 협상

- "한중FTA 협상 쉽지 않을 것"... 2차 협상 진전 없어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두 나라 사이의 협상

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에서 열렸던 한중FTA 2차 협상은 향후 양국의 협의체를 만드는 수준에서 마무리됨.

- 당초 상품 및 서비스, 투자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상지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양국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분석.
- 최 수석대표는 "한국은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등의 항목을 독립챕터로 협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중국에 전달했지만 중국 측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함.

○ 협상은 초민감, 민감, 일반 품목으로 나뉘어 협상 - "우리나라는 농수산업, 중국은 일부 제조업 분야 민감"

-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FTA 양허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될 상품분야 초민감·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최 대표는 "우리나라는 농수산업이, 중국은 상대적으로 일부 제조업 분야들이 민감하다"며 "양국은 제조업과 농수산 분야의 민감성을 서로 반영하기 위해 민감 품목을 분리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앞으로 초민감품목·민감품목·일반품목의 정의를 구체화한 뒤, 품목별로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짐.

○ 한중 FTA 2014년 체결될 듯 - 서규용 장관 밝혀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중국과 FTA 협상을 마무리하면 토지를 이용해 쌀과 보리, 콩 등 곡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농정 개혁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3) 3차 협상 - 양측, "합의 성과 나오기 시작"

- 농업 분야 민감품목으로 - 대략 15년 안에 농산물 개방 될 듯
 - 한국측은 3차 협상을 마치고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서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함.
 - 8월 22~24일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분야 일반 품목은 10년 이내, 민감품목은 10년 이 넘는 기간에 각각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 쌀 등 양허 제외 품목이 포함될 초민감 품목의 정의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4차 협상에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됨
 - 한국정부는 서비스, 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권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논의도 잘 진행돼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발표함.
 -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협상에 참여했던 외교부의 한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최근 동북아 영토분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국 측의 협상태도가 종전보다 우호적이고 우리 측 대표단에 대한 환대도 부담스러울 정도였다"라고 언급하며 정치외교적 영향이 작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시인함.
- 민간품목군 '크기', 품목 수 뿐 아니라 수입액 기준도 적용
 - 이번 협상에서는 또 한국측이 주장한 '품목군별 크기 산정 시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 적용'을 중국이 수용함.
 - 한·중 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품 분야에서 일반 품목은 협정 발효 뒤 10년 이내에 관세를 '0%'까지 낮추고, 민감품목은 협정 발효 '10+a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a는 각국이 보호해야 할 민감도에 따라 품목별로 달리 정하기로 함.
 - 그러나 쌀처럼 양허(개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일정 수입량에만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초민감품목의 정의에 대해선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업, 경공업 등과

관련된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정할 것으로 보임.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한 관세를 물려, 해당 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나 결국 개방한다는 것.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 적용의 의미

최 대표는 “한국의 중국 수출품목은 소수품목에 집중돼 있다. 품목 수로 따져보면 6.7%에 해당하는 품목이 전체 수입액 기준으로 40%를 웃돈다”고 말했다. 한·중 FTA에서 다루는 상품의 수는 1만1200여개다. 만약 초민감품목을 5%라고 가정할 때 품목 수만 기준이 될 경우 중국은 한국 상품 560개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중국 전체 수입액 가운데 한국의 LCD패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인데 중국은 당연히 이 LCD패널을 초민감품목 560개 가운데 하나로 지정해 개방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품목 수뿐 아니라 수입액 15%도 적용할 경우 5%라는 기준을 넘기 때문에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한중 FTA 협상 예상

○ 3차 협상을 통해 협상의 모멘텀 확보

- 2차 협상까지 중국측의 소극적 태도로 협상 진척이 안되었으나, 한국측의 농업 등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측은 최근 센카쿠열도에서 일본과 갈등 등을 한중관계의 무게가 실리게 되자 적극적 협상에 임하며 협상의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됨.
- 3차 협상 결과에서 농업을 민감품목으로 내주어 10+@ 개방과 중국의 품목과 수입액 기준 받은 것으로 이를 말해주는 것.

○ 4차 협상, 중요한 고비가 될 것.

- 중국측의 입장은 한중FTA 추진으로 입장이 쏠리며 한국측

의 입장만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음.

- 10월 한국측에서 초민간품목 등을 타결되면 사실상 1단계 협상을 마무리됨. 이명박 정부하에서 협상의 쇠기를 박을 것으로 예측이 적중되는 것임.
- 이에 9월 정기국회에서 검증과 쟁점화 및 10월 한국협상에서 적극적 대응 필요함

4. 한중 FTA 국내에 미치는 영향

1) 농업엔 '재앙', 중소기업엔 '위협', 대기업엔 '새로운 기회'

○ 농업에 사망 선고

-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축수산업의 회복불능의 재앙이 올 것.

	한미	한EU	한중	총계
15년간 농업생산액 감소합계	12.2조원	2.6조원	29조원 추정	최소 43조원
년평균 감소액	8150억원	1776억원	1조 9560억원 추정	최소 2조 9486억원

[표 1] 정부 발표에 따른 직접피해액(농업생산감소액) 추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용

○ 중소기업 '위협'

- 중소기업, 특히 내수용 중소기업에게도 피멸적 타격이 올 가능성이 높음. 정부의 용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해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
- 섬유·의류 산업 같은 경공업은 관세철폐로 인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늘어 국내 업체가 줄어들고 고용 인력도 감소해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사됨.
- 중국산 저가물품 공세로 인해 내수용 중소영세산업의 쇠락 및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 중 88%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한중 FTA 쓰나미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고용위기에 몰린 가능성이 높아짐.

○ 대기업엔 ‘기회’

- 전기·전자,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등 대기업들에게 엄청난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이익을 볼 산업	손해를 볼 산업
석유화학, 공작/정밀기계, 고급철강, 전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완성차	섬유, 중급이하 철강, 비철금속, 경공업, 소비재 생산, 노동집약적 산업, 농축수산업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 다수

[표2] 한중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계 간담회 의견(2010.4)

- 일부 대기업들은 이익을 보겠지만, 대부분의 부품업체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한중FTA는 일부의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의 타격을 강요하는 것.

2) 먹거리 안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

- 여기에 한중 FTA 인해 먹거리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됨. 2000년 중국산 납꽃게 파동, 2005년 기생충알 김치, 2008년 중국산 멜라민 파동 등이 더욱 확대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중국에서는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 지역화 개념을 도입하자고 하고 있음. 지역화란 예를 들어 산둥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물 수입이 중단되더라도 광둥성의 축산물 제품은 수입제한 할 수 없다는 것.
- 이번 한중FTA 협상에서 중국과의 지역화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식품안전에 문제는 더욱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음.

5. 국민 의견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협상 추진

1) 한중 FTA도 밀실추진 - 연구용역 결과 대부분 비공개

-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국민적 의견 수렴 뿐 아니라 국회

검증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음. 하지만, 한중FTA 협상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고 있음.

- 한중 FTA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9년간 산관학 연구를 지속해왔음. 당연히 한미FTA 보다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이 점을 들어 한국 정부는 한중FTA 졸속추진이 아닌 충분히 연구 검토되었다고 강변하고 있음.
-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자료들을 철저히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는 것.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자료 분석한 결과 정부 5개 부처가 2005년~2011년 발주한 한중 FTA 관련 연구용역 27건 중 24건(88.9%)이 비공개 처리되어 있음. 이는 한미 FTA 관련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율보다 높은 수치임.

발주기관	연구용역 갯수	비공개연구용역갯수
외교통상부	11개	11개
기획재정부	5개	2개
지식경제부	2개	2개
농림수산식품부	7개	7개
보건복지부	2개	2개

[표4] 한중 FTA 관련 연구용역 결과 공개 여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 인용

2) 통상절차법 발효 이후 한중 FTA 철저 검증 (?)

- 또한, 한중FTA 관련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조차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는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음.
- 적어도 국민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선 피해예상 산업은 어떤 산업이고 얼마만큼의 피해가 예상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함.
- 특히, 올해 7월부터 통상절차법이 발효되었음. 통상절차법이

정한 국회의 검토가 가능하도록 정부는 국회에 협상 과정 등을 철저히 보고해야 함.

4. 한중 FTA 대응을 위한 국회, 시민사회, 농업계 연대 방안

1) 국회, 시민사회, 농업계 연대의 필요성

○ 연이은 FTA로 기진맥진한 농업계

- 한 EU FTA 이어 한미 FTA 날치기 통과까지, 그리고 한중 FTA 추진. 정부는 세계 3대 경제권과 유일한 FTA 맺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 높이지만, 농민들에게 사실상의 사망선고 일뿐.
-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농민들은 너무 많이 FTA 로 기진맥진한 상황. 2002년 한칠레 FTA로 시작해서 2006년 한미FTA협상 체결반대, 2010년 한EU FTA 비준 반대, 그리고 2011년 한미FTA 날치기 저지까지.
- FTA 저지 투쟁만 10년. 한중 FTA 높은 파고가 또다시 몰려오지만 한편으로 농민만의 힘으로 막아질 수 있겠냐, 하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음.

○ 한미FTA 비준 통과 그리고 총선에서 파동으로 - FTA 되도록 멀리 하려는 정치권 (?)

- 작년말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 비준과 연이어 한미FTA 반대 여론이 70%까지 오르자 정치권의 최대 이슈였음.
- 하지만, 올초 당시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ISD 재협상 없이는 한미FTA 폐기 선언을 했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한미FTA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의 총리를 역임한 한명숙 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렸고, 민주당이 이후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한미 FTA 이슈를 수면 깊숙이 가라앉아 있음.

- 한중 FTA 협상이 5월 초부터 시작되었고, 통상절차법도 발효가 되어 국회의 FTA 검증 권한은 비록 제한적일지라고 확대되었지만 한중 FTA 관련 국회 점검이 진행되었다는 언론 보도는 찾아 볼수 없었음.
- 한중 FTA 한국경제에 또는 한국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하에서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 언론,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은 FTA

- 조, 중, 동 등 보수신문을 포함해 모든 신문지상과 언론에서 한중FTA 기사를 찾기 어려울 정도.
- 그것도 협상 중일때는 잠깐 협상 관련 내용만을 언급하는 정도이지, 한중FTA 미치는 영향 등은 전혀 보도되고 있지 못한 상황.

2) 국회의 고유 권한 - 정부 정책의 비판과 견제

○ 가칭) 한중FTA 연구하는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 구성 제안

- 농해수위 의원과 한중 FTA 관련하여 관련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
- 우선, 핵심 쟁점 관련하여 워크숍을 진행
- 각 당의 포스트 의원 정하고

○ 국정감사 기간에 한중FTA 쟁점화 시도

- 10월 5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한중FTA 쟁점화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 질의 등 진행.
- 이를 위해선 우선, 산학연 연구 보고서를 각 부처별로 제출하라고 요구해야 함.

○ 필요에 따라 농해수위 차원의 청문회 등 개최

- 10월 22일 경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어 큰 폭의 합의가 예상되는 만큼 농해수위 차원의 청문회 등을 개최하여 정부를 묻지마 1단계 협상 마무리 전략을 무산시켜야 함.

3) 한중 FTA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한중 FTA 관련 비판적인 학자 및 연구자 다수가 존재함.
- 전문가와 학자, 법률가 등으로 구성하는 한중 FTA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정책자문위원회 차원의 연구 보고서 초안 제작 예정.

4) 시민사회, 농업계 대선전까지 선전 홍보 캠페인, 집회 등

- 10월 22일 4차 협상을 즈음하며 농업계 규모있는 집회 개최 예정.
- 선전 홍보 캠페인 계획
- 전농과 전여농의 경우 11월 22일 대규모 농민 집회 개최 등

5) 농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그리고 국회의 연대

- 각 분야에서 한중 FTA 관련 사업 전개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

6. 마치며

- 대통령 후보마다 평화, 민생, 복지, 정의를 강조하며 선진사회를 약속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농업국가라는 점을 애써 잊으려고 하는 듯해 보임.
- 프랑스의 식량자급률은 무려 329%에 이르고, 독일도 147%, 미국과 캐나다, 호주도 100% 훌쩍 넘고 있음
- 한국의 식량자급률 22%, 쌀을 제외하면 4%대. 2010년 기준

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

- 농업의 괴멸적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한중 FTA 협상을 언론과 국회도, 다루고 있지 않고,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시기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민적 동의 없이 문지마 타결로 나아가고 있음.
- [목구멍이 포도청],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속담은 바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속담. 하지만 한 EU FTA에 이어 한미 FTA 그리고 한중 FTA이제 외국 기업들의 손에 우리의 목구멍을 맡겨야 할 판.
- 정말 대선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대하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식량주권이 다뤄지고, 먹거리 안전 문제, 그리고 한중 FTA 다뤄지길 간절히 기원해 봄.